

### 양심적 병역거부 광주 20대, 유엔인권이사회에 첫 긴급청원

# ‘자의적 구금’ 여부 유엔 판단 주목

#### 1심 무죄→2심 1년6개월 선고 대법원서 구금 예상되자 제기 광주·전남 현재 32명 수감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투옥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며 유엔(UN) 인권이사회에 긴급청원을 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UN 인권이사회에 청원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긴급청원’은 국내 첫 사례로, UN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3일 오두진 변호사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9)씨는 지난 1일 UN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5월 광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같은 해 11월 같은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김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자기방어권 등을 인정받아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김씨는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존 판례상 유죄 확정판결과 구금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돼 긴급청원을 냈다.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들에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왔다.

긴급청원은 정원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자유 박탈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소요되는 일반청원 처리기간에 비해 짧은 시간에 처리된다는 것이 오 변호사의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종교 등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는 군복무 제도는 양심·종교·사상 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구금하는 것 자체가 UN 자유권규약 제9조인 ‘자의적 구금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의적 구금이란 국가기관이 특정 개인을 불공정하게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억

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UN 인권기구 청원은 있었지만 ‘자의적 구금’과 관련한 ‘긴급청원’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오 변호사는 설명했다. 지난해 7~8월에도 631명이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청원을 했으나 이들은 모두 구금상태에서 긴급청원은 아니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 59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돼 있으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교도소 19명, 순천교도소 6명, 해남교도소 4명, 장흥교도소 3명 등 모두 32명이 포함돼 있다.

광주·전남지방방무청도 2013년 50명, 2014년 37명, 지난해 45명 등 최근 3년간 132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병역법 위반(병역기피)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오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있는 UN 인권이사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여전히 우리 사법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착한 고교생들 사랑의 연탄 배달  
설명절을 앞둔 3일 광주 흥흥고등학교(교장 윤영섭) 1학년생들이 서구 양동 저소득 가정용 찾아 연탄 배달 봉사하고 있다. 학생들은 심심일만 겹은 금액으로 3400장의 연탄을 177가구에 전달했다.  
/최혜진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지검, 설 전후 불법 선거운동 집중단속

#### 공안부 검사 증원 등 총력 수사체계 구축

광주지검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총력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섰다. 특히 농·어촌이 많은 광주지검 관할구역 특성상 명절 세시풍속을 빗자한 선물 또는 식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설 전·후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3일 총선에 대비해 공안부

검사를 증원하고, 수사과 직원 전원을 선거범죄 단속에 투입하는 등 총력 수사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역검사 전담제 실시와 함께 지역별 특별 현장단속반 편성·운영, 고발전 긴급통보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징후 포착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시스템도 구축, 선거범죄 조기 차단과 공명선거 질

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공천대가 또는 선거운동 대가 지급, 유권자·후보자 매수,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 사적 모임에서의 기부행위, 선거 브로커의 금품요구 등 금품선거다. SNS,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토론회·연설회·여론조사 등의 기회를 이용한 비방·허위사실 확산의 흑색선전과 각종 여론조작 사범 등도 포함됐다.

선거사범 신고는 전화(062-231-4615, 야간 062-231-429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spo.go.kr/gwangju)로 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불법 LPG차량 무더기 ‘과태료 폭탄’

#### 전남도, 1815명 300만원씩

전남도가 불법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사용한 운전자 1800여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부과한다.

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전남을 대상으로 정부합동검사를 벌여, LPG 차량 불법 사용자 1815명을 적발했다.

LPG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들과 같은 가구원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같이 살던 가족 등이 5년 안에 가구를 분리할 때에는 6개월 안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 상당수는 서류상으로 가구를 합쳤다가 차량 등록 후 분리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일선 22개 시군에 이들 업체 운전자들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전남처럼 다른 지역에도 LPG 차량 불법 운행이 만연된 것으로 보고 광주·시도 LPG 차량 불법 운전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LPG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2분의 1 수준이다. LPG 차량 운전자는 돈을 아낄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세수(稅收)가 준다.

전남도 관계자는 “LPG 차량 불법 운행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22개 시군이 감경사유 등을 검토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원정 절도·비싼 분유만 훔쳐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주말이면 인전에서 광주까지 내려와 중소 마트에서 비싼 분유만을 골라 훔쳐 판매한 30대 주부가 소고랑.

○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인전 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이모(여·35)씨는 지난 7월4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22만원 상당의 산양분유 4통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산양분유 100통(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

○경찰은 “마트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고민하던 이씨가 1통에 5만5000원에 판매되는 산양분유만을 골라서 훔친 뒤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서 3만 8000원에 처분했다”며 “이씨는 현재 다른 절도 사건과 사기로 구속수감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무단횡단 잦은 ‘마의 무진대로’ 또 사망 사고

#### 광산구 우산동 ‘80m 도로’...새벽 길 건너던 30대 숨져

#### 5년 사이 7명 사망·11명 중경상...예방 대책마련 시급

무단횡단 사망 사고가 잇따라 ‘마의 도로’로 불리는 광주 무진대로 무역회관 인근 구간(일명 80m도로)에서 또다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구간에서는 지난 5년 사이 무단횡단으로 7명이 차에 치어 숨지는 등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새벽 4시50분경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무등산랜드(사우나) 앞 무진대로에서 길을 건너던 황모(35)씨가 나모(67)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황씨는 왕복 16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2차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개통한 무진대로는 광산구 운수동 운수 나들목에서 서구 농성동 광천1교 남단까지 이어지는 길이 9.27km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제한속도는 시속 80km다. 무단횡단 사고 빈발 구간은 도로 폭이 80m에 달해서 붙여진 일명 80m도로(광주 무역회관 부근~광주여대 부근)로 인근에 지하보도가 있지만 도로 양쪽으로 아파트와 대형마트, 상업시설이 밀집해 보행자 무단횡단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 경찰이 2007년 1.5m 높이의 중

#### ■ 무진대로 보행자 사고 빈발지역



양분리대를 설치하고 무단횡단 경고 표지판 등 교통 시설물을 보강했지만 지난 2011년부터 최근 5년 사이 해당 구간에서 숨진 보행자만 7명, 중경상이 11명에 달할 정도다.

사고 빈발 지점에서 200여m 떨어진 지하보도는 어둡고 치안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광주여대 인근 횡단보도

####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 공무원

#### 요양비 인정범위 대폭 확대키로

소방·경찰·우정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요양비의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

는 500여m나 떨어져 있어 보행자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다. 여기에 해당 도로의 양옆에 유흥시설이 밀집한 탓에 한밤중에 취객들이 별다른 위험성 인식도 없이 길을 건너다 변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런 탓에 광산구가 지난 2011년 해당 구간에 육교 설치를 검토했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이용객도 극히 저조할 것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육교 설치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로도 해당 구간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무단횡단 사고를 막으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광주시, 광산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정기준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화재진압을 하다가 중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상급 병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5일이었지만, 앞으로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상급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협뉴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